

편집국에서

최현수

편집국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조기 대선’이다. ‘12·3 내란계엄’으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3년 만에 치러진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국적 상실과 민주주의 후퇴, 국가적 대혼돈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3년 국정 실패는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치는 사라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악화됐고, 의료 대란으로 의료현장과 대학에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뜬금없이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은 국에 달했다.

결국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계엄 행위를 일으킨 지 122일에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시켰다. 특히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하지만 파면된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최소한의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였다. 기대했던 공정과 정의는 허상이었고, 타협과 배려보다는 독선과 불통이 넘쳐났다. 국격은 추락했고,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탄핵의 강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다.

기고

박관서

시인·오월문예연구소 운영위원



미안하지만 윤상원 열사가 졌다. “우리가 비록 자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이미 도시의 외곽에서는 시민군들과 계엄 진압군들이 교전하는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1980년 5월 27일 2시경에 윤상원 열사의 한 점 두려움이 없는 명쾌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린 고등학생들의 귀가를 설득하였다. “고등학생들은 나라. 우리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역사의 중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투쟁에 같이 나섰던 동지들의 삶도 챙긴다. “병관아, 그리고 명관아. 너희들은 지금 이곳을 빠져나가라. 오늘로 광주도 끝이다. 그리고 너희들 목숨도….” 너희는 제발 집으로 돌아가거라.”

윤상원 평전에 의하면 ‘어쩔 이 순간이 그 애들과의 마지막 해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로의 살이라도 뜯어 나누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권하는 그 마음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에 가능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죽음을 통감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자기 죽음으로 불의를 증언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서 기억 투쟁의 밑바탕이 되겠다는 것일 터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자리

취재수첩

12조 필수 추경, 광주·전남은 없었다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놴다.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나온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긴박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싸늘하다. ‘필수’라 불리는 이

조기대선, 광주·전남 공약 치열하게 쟁겨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피 말리는 4개월 동안 용기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호했다.

탄핵 반대 여진도 여전히 남아 있다.

파면된 대통령은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탄핵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정부의 경제·군사 분야 관료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회주의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대행’들은 법적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동안 초대 이승만부터 13명의 대통령을 경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에 크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국가적인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를 여러 번 지켜봤다. 45년 전 전두환 군부 쿠데타, 8년 전 박근혜 국정농단 이 그랬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는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국민을 가장 우선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사임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뽑으면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독주 속에 김두관·김경수 ‘양강’이 도전하는 ‘3파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 힘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후보 등 8명 1차 관문인 ‘4강행 티켓’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선택’도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때마다 ‘시대정신’을 실천해 왔다.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호남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당선 후에는 지역 발전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소외를 받아온 게 현실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호남의 요구’를 강력하게 천명할 때다.

광주·전남의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면서 지방소멸, 인구소멸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출신 장관을 찾아보기 힘들고, 텃밭인 민주당 지도부에도 지역 출신은 거의 없다. 당연히 발언권도 줄어들고, ‘호남패싱’ 분위기도 읽힌다.

그러다 보니 산적인 광주·전남의 현안사업 추진이 더딘 편이다. 광주의 AI실증밸리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이후 감감무소식이고, 전남의 전남 의과대학 설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도 갈 길이 멀다.

다행히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발 빠르게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건의할 주요 공약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을 포함한 ‘AI 모넨시티-The BRAIN 광주’와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국가 주도 민군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등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무안공항 활성화, 순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등 대선 공약 75건을 발표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광주·전남이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광주·전남 공약과 비전이 유력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이번에도 ‘전략적 목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그에 합당한 ‘몫’을 반드시 챙기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것이 낙후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윤상원 열사와 12·3 비상계엄 쿠데타

에서 죽었고, 다시 반세기도 지나기 이전에 이졌다. 앞으로 그는 여전히 이길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12·3 비상계엄 쿠데타는 달랐다. “나라가 위급하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관약구에서 배달하다 왔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인다”라며 “국민을 깨워주지 않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아니 소수여당이 됐으면 협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국민의 뜻인데 국민을 때려잡겠다는 게 말이 되나?” 한 언론에 소개된 일반 시민 윤주민(59세) 씨의 이야기이다. 비상계엄 쿠데타가 발령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으로부터 겨우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12월 4일 오전 0시 15분경에 국회 앞에 시민 약 200~300명이 모여 ‘계엄 철폐’를 외치는 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어찌된 계엄의 실행체였던 일부 군인과 경찰들의 반발은 거의 저항에 가까웠다. 특히, 계엄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 내지 지체시켰으며, 현장 지휘관들 역시 계엄령이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요지문에 드러난 것처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태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난 5·18과 이번 12·3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해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상원 열사의 눈으로 보면 이는 간단명료해진다. 민주주의 또는 민주공화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번 12·3 비상계엄 쿠데타에 대한 현재의 판결문 이후에 앞으로는 군사쿠데타가 없으리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단순한 현재 판결문 때문이 아니라 12·3 군사쿠데타를 막아섰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대응 태도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었던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민주공화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는지를 잘 안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했던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과 부유층의 권력 독점이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 전위쿠데타의 구성원이었던 엘리트 권력층이 본색을 드러내며 총력기하는 듯한 우리의 상황이 언뜻 겹친다. 아직도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또한 프랑스혁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시원이 되었던 프랑스가 곧이어 나폴레옹 독재를 불러온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우리의 4·19 이후에 5·16 군사독재가 찾아온 연유이기도 하다.

힘 있는 자들의 수월한 권력 취득 수단인 불법 쿠데타를 비롯한 반헌법적 행위들을 막아내는 시민들 개개인의 힘이 곧 민주주의의 최대 보루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아마 이번 12·3 비상계엄 쿠데타를 보면서 윤상원 열사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공개라.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 않ारा. 각각의 책임감이 모일 때만이 살아남는 것이랑개라!” 그리하여 서로 함께 확인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윤리 이전에 시민들 개개인의 지속된 참여를 통해 계속 새롭게 바로 세우는 사회적 주체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간구하노니, 윤상원 열사가 계속 지기를 바란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실마리는 결국 현장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현인의 노력은 단순한 ‘선발’이 아닌 ‘배제’에 가깝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추경안이

짜인 상황에서, 지역의 몫을 다시 끼워넣는 일은 쉽지 않다. 예산 협상의 판도는 결국 정치적 고려와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국가는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공평한가로 평가받는 다. 지금 광주와 전남의 경제와 산업은 충분히 ‘필수’라는 이름 아래 포함될 자격이 있다. 이 지역의 성장은 수도권을 위한 보조동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는 바로미터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숨통을 트워 줄 예산이 추가되길 바란다. 진짜 ‘필수 추경’이 되려면, 그 안에 지역의 삶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OPINION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사설

광주·전남, 분산 에너지 플랫폼 성공하길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 대규모 발전소 생산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 지역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종류로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가스 엔진 발전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과 연료전지, 고효율 난방 시스템 등이 있다.

분산 에너지는 장점이 많다고 한다. 먼저 중앙 발전소에 의존 위험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데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또 에너지 생산과 소비지역 간 거리가 짧아 송전 손실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소비 과정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북·제주와 함께 이런 특성을 가진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메가시티 첨단육성지원(R&D)’ 사업에 최종선정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반의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2년간 총 89억원(국비 46억원, 지방비 20억원, 민간 2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분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개발이 목표다.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전력계통 불안정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압·주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력 제어 및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의 단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남 분산 에너지 관리시스템, 전북 초단주기 ESS, 제주의 섹터 커플링 등 각 지역의 강점을 통합, 지역 내 분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플랫폼 개발사업은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이 체결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에너지 분야 협력과제를 구체화한 첫 실행사업이다. 반드시 분산 에너지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에 성공해 지역 전력자립은 물론 전국적 계통 불안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 농가 10명 중 6명이 고령층이래는데…

‘농도’ 전남’의 암울한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통계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는 전남 농가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가는 13만9132가구, 인구는 26만2957명(남자 12만4421명, 여자 13만8536명)이었다. 이는 1년 전(농가 14만4762가구, 인구 27만8430명)에 비해 농가는 3.8%, 인구는 5.5% 감소한 수치다. 농가 수 감소폭은 전국적으로 볼때 제주도(-4.1%)에 이어 두 번째지만 농가 규모(제주 2만9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전남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농가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다.

지난해 전남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의 60.7%인 15만9732명이었는데 이중 74%가 넘는 11만8564명이 70세 이상의 초고령자라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국 농가평균인 55.8%보다 4.9%p 높고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19.2%)과 비교할 때는 무려 3배가 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전남 농가의 64.9%인 9만 491가구가 지난 한해 농·축산물 판매로 버는 돈이 1000만원 미만이었다. 1억원 이상 버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4.4%(6140가구)에 불과했다.

또 60.1%(8만3692가구)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농사만 전문으로 하는 전업 농가였고, 전체 농가의 49%인 6만7755가구가 0.5ha 미만의 경지를 가진 소작농이라는 것도 전남 농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 전남 어가와 임가 역시 65세 이상이 각각 52.6%, 59.9%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전남 농촌의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급리·고환율·고물가 여파 속에 비료, 농약, 인건비와 같은 경영비 부담은 더 늘고 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세 또한 계속되는 등 농사 짓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